

박원순 시장, 국토부에 ‘국·공유지 일몰’ 반대 의견

“축구장 120개 공원 지정실효 위기”

환경시민단체 면담서 뜻 밝혀
“한뼘의 공원과 실효되면 안돼
모든 권한 동원해 저지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국·공유지의 실효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 120개가량 넓이인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733㎡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시는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54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민간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다만 나머지 21%인 18만 189㎡가량에 대한 실효 방지가 큰 과제”라며 “정부가 실효 대상으로 공고한 땅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원 입구인 곳 등이어서 실효 시 공원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에 걸친



박원순 시장이 16일 환경시민단체 대표단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5057필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박 시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공원 활용도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앞으로 시민 삶의 질에서 공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이른바 ‘그린 뉴딜’이 논의되는 마당에 이런 (국토부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몇몇 분들의 생각의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의견을 접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은 한 뼘의 공원과 실효되거나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실효가 강행되면 도시공원, 지구단위계획 등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공원일몰제에 따라 올해 7월 1일 공원부지 117.2㎢가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몰 기한을 30년으로 둘 수 있으므로 실효를 지금부터 10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에는 도시공원 일몰대응 시민협의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승용차요일제 혜택 내달 8일 종료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포인트

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

적이 나오면서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다만 서울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다음달 8일 그기간이 끝나면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기존 회원 정보가 모두 파기된다.

요일제 폐지로 일원화된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당 3000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는 “안전 우선”

관광공사, T맵·KT 빅데이터 분석
근거리·야외활동·가족 단위 선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형태를 보면 가족과 함께 근교에서 안전한 여행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SKT T맵 교통데이터와 KT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시점인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21주간 국내 관광객의 이동 패턴과 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관광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코로나19기간 중의 관광 트렌드를 ‘S·A·F·E·T·Y(안전)’라는 6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는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Activity) ▲가족단위(Family) ▲자연친화(Eco-area)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관광 수요회복 조짐(Yet..)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국내 첫 발

설계안과 상이한 시공 사례 빈번
건축가 의도 준공까지 구현 유도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적용기로

서울시는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완공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건축가가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도면 해석의 차이, 자재 변경으로 실제 건축물이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

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관련법에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 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어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제도에는 건축물 설계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공사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이 제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시원한 물줄기’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서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다. /뉴시스

중소 방역제품 1만개 뉴욕간다… “해외판로 개척 물꼬”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의 중소기업이 만든 코로나19 방역용 제품과 콘텐츠 이용권으로 구성된 방역키트 1만개를 미국 뉴욕으로 보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가 개척되기를 기대하며 뉴욕 시민들이 서울 중소기업의 제품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라고 SBA는 설명했다. 선정된 키트는 7월 24일 뉴욕 세관·통관을 거친 뒤 뉴욕시 브루클린 자치구의 저소득층 거주민 약 1만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패키지에 포함된 제품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항균스프레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용 제품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이용권이다. /김현정 기자



중소기업 방역제품 등으로 구성된 ‘방역키트’.

어린이가 직접 만드는 ‘꿈의 놀이터’ 가동

서울시 6개 공원에서 프로젝트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참여해 놀이터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월드컵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진행한다

고 16일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커뮤니티형 놀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아이들이 직접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상상하고 기획한다. 정형화된 놀이기구에서 벗어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 울타리 세우기, 물길 만들기, 모래

성 쌓기 등 전 과정을 주도한다.

어린이들과 놀이터를 만들어 갈 ‘놀이활동가’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6개 공원은 마포구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노을공원), 도봉구 반곡어린이공원, 강북구 벌리어린이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양천구 신월동근린공원이다.

시는 놀이터 만들기예 동참할 ‘어린이 꿈놀이단’ 9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참가신청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